이통사 '늑장대응·부실보안' 송곳 검증 예고

이통사 소액해킹·내부망 유출 등
과방위, 24일 해킹 관련 청문회
KT·LG U+ 대표, SKT 책임자 참석
정부 직권조사 제도개편 분수령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주요 통신업체들에서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칼을 빼든다.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비롯한 통신 3사의 보안 최고 책임자들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KT에는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LG유플러스에는 내부망 해킹 의혹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과 기업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 그리고 부실한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통신업체들의 해킹 관련 청문회를 24일에 연다. 이번 청문회에선 ▲피해 규모와 유출 범위 ▲늑장 대응 및 불투명한 통보 ▲허술한 인증 체계 ▲보안 투자와 시스템 재설계 ▲이용자 보상과 경영진 책임 등 다섯 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의 기폭제가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피해가 언론에 처음 알려진 시점보다 무려 한 달 전인 8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과 27일에는 각각 33건, 106건으로 폭증하는 뚜렷한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는 해커들이 사전에 치밀한 테스트를 거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음을 시사한다.

비판의 핵심은 KT가 이처럼 명백한 이상 신호를 왜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했냐는 점이다. 통신사라면 응당 갖추고 있어야 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KT는 "수사 문의 후 피해자 명단 확인과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한 달 넘게 고객 피해를 방치했다는 '늑장 대응'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문회에서는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 대응 프로세스의 적절성, 그리고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 여부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해킹당하며 내부망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 해외 보안 전문지는 해커가 시큐어키의 계정 정보를 통해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수천 대의 정보와 임직원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는 "내부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핵심 보안 관리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과정에서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특히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현행법상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청문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CEO가 빠지고 보안 책임자가 출석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와 이번 유출 의혹으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는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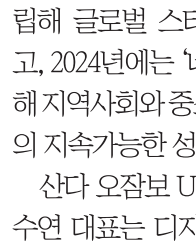
이번 청문회는 제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회는 이미 해킹 정황만으로도 정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역시 "기업 신고 이후에만 조사 가능한 현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도로 '정보보호 체계 대응 TF'를 꾸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킹 신고 이후에만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통신사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당국에 알릴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최수연 네이버 대표 UNGC 신임이사 선임

17년 만의 한국인 리더



네이버는 18일 최수연 대표(사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임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17년 만의 선임이다.

UNGC는 전 세계 167개국 2만5000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에서 책임 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UNGC는 최 대표가 AI 기술 전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원칙을 확립하며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들과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지난해 6월에는 AI 시스템 전 주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AI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또한 최 대표는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해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에 앞장섰고, 2024년에는 '네이버 임팩트'를 공개해 지역사회와 중소상공인, 스타트업과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최수연 대표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라고 평가했으며, 이동건 UNGC 한국협회장은 "네이버가 국제무대에서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 본격화

위메이드는 18일 '프로젝트 스테이블원' 행사를 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자체 개발한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 원(STABLE ONE)'을 공개하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운 새로운 금융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위메이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대중화를 통한 불편과 불안 해소 ▲전용 고성능 블록체인 구축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춘 인프라 제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내세웠다.

이어 위메이드는 지난 7년간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차세대 인프라 '스테이블 원'을 소개했다. 안용운 CTO는 "스테이블 원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고성능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갖췄으며, 규제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더리움과 100% 호환돼 기존 서비스를 수정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초당 30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해 국내 간편결제 거래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원'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네이티브 수수료'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최빛나 기자

KT, 이동통신 핵심정보 유출 정황 확인

피해 고객 362명·피해액 2.4억
IMSI·IMEI·휴대폰 번호 등 유출

KT 소액결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핵심 정보가 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소액결제를 넘어선 통신망 보안 위기가 현실화됐다.

KT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민감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상품권 결제 중심의 피해만 언급했으나, 1주일 만에 교통카드 등 다른 결제 영역까지 확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KT는 기존 278명으로 발표했던 피해 고객 수가 362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피해 금액도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확인된 불법 기지국 ID 2개 외에 2개가 더 드러나 총 4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만명이 이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으며, 이를 통해 IMSI·IMEI와 휴대폰 번호가 외부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다.

다만 KT는 소액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등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심 인증키 역시 노출되지 않아 복제폰을 이용한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A(48·중국국적)씨와 B(44·중국국적)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액결제 사기 수준을 넘어, 이동통신 핵심 정보인 IMSI와 IMEI가 실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IMSI·IMEI는 단말기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 KT가 성명·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입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침투할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과, 피해가 발생하고도 일정 기간 고객들에게 즉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 당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구조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시작된 것도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뒤였다.

KT는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피해 고객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 차단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 운영에 대한 통제 장치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2000여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B

B tv+ 가입자 대상 '가을야구' 티켓 제공

SK브로드밴드는 다가오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을 맞아 B tv+ 가입자를 대상으로 'B tv+ 포스트시즌 직관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B tv+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키즈, 다큐멘터리 등 약 20만 편의 전 장르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 VOD 월정액 서비스다.

올해 KBO는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하며 현장 경기 직관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수요에 맞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이벤트는 B tv+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9월 25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1인 2매씩 최대 130장의 포스트시즌 직관 티켓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9월 30일 B 월드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응모 방법은 B tv+ 이벤트 메뉴에서 ▲와일드카드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중 원하는 경기를 선택하고, 셋톱박스를 모바일 B tv 앱과 연결(페어링)하면 된다. 10월 추석 시즌에는 한국시리즈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추가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김서현 기자